

해방후 분단국가교육체제의 형성, 1945~1948 :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등장을 중심으로*

김기석
(교육학과)

I. 서 언

남과 북에는 각기 국립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이하 김대)이 “최고학부”로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에 두 “최고학부”의 존재는 분단국가교육체제를 가장 분명히 보여준다. 필자는 일제 패망후 두 대학이 창설되는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¹⁾ 이 두 대학은 개교 시기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나 절차 및 방법도 같다. 교수진 구성에 관한 한 두 대학은 뿌리도 같다. 필자는 대학 탄생과정의 그러한 특징에 비추어 두 대학을 “一卵性 雙生兒”라고 칭하였다. 앞의 연구는 개별 대학의 창설과정을 따로따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대학 분단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단국가교육체제 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대학의 등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조선인을 역사의 중앙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이 방법은 지극히 당연한 방법이나 그간 근대교육사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종래에는 한국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對韓 점령정책과 외국 점령군의 교육정책의 구현에 주목하고 그것에 한국인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물론 이 시기 지배적 권한과 권력을 행사한 것이 외국 군대이므로 그러한 방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타율적 사관이라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 종래 연구는 물론 이른바 “수정주의 연구”에서도²⁾ 대체로 미국의 對韓 정책과 미군정의 교육개혁의 추진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이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을 분석하였

* 이 연구는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자유공모과제)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拙稿,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教育理論』, 서울大學校 教育學硏究會, 제10권 제1호, 1996 ; 拙稿,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羅山朴容憲教授 停年退任記念論文輯』, (근간).
2) 수정주의 연구란 80년대 국대안을 다룬 일련의 석사 논문을 지칭한다. 그간의 성과를 가장 잘 집약한 논문은 李吉相, “美軍政下에서의 進歩的 民主主義 教育運動”, 韓日文化交流基金, 第九次 韓日日韓合同學術會議, 1996, 東京 참조.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제 패망 후 조선인이 민족교육을 재건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에 주목하였다. 물론 외국 점령군의 지배에 대한 대응도 분석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조선인의 주체적 노력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외세의 개입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파악하였다. 이 방법은 내재적 발전론의 연장에서 도출된 것으로 그간 韓國教育史庫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연구과제의 공통적 문제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실지로 이 방법을 여러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았다.³⁾ 그 결과, 앞으로도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신념에 변화가 없다. 여기서는 그간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원자료 몇 가지를 사용하였다. 간행된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미군정청 학무국자료와 이른바 “鹵獲文書”로 미국 국립문서관리청에 기록 집단(Record Group 이하 RG) 332와 242로 각기 분류 보관되어 있는 자료이다.⁴⁾

II. 선행 연구 검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국대안은 누가 왜 제안하였는가?” “국대안 반대운동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국대안 반대와 김대 창설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앞의 두 질문은 그간 서울대를 탄생시킨 국립서울대학안(이하 국대안)을 분석한 연구에서 늘 다루었던 질문이다. 天園 吳天錫 박사의 『韓國新教育史』 이래 국대안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조선인은 능동적이었고 미국인은 수동적이었다고 보았다.⁵⁾ 견해를 달리한 수정주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대안은 학무국 미국인 장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를테면, 국대안은 “미국인 관리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의 추진 과정에서 악역은 한인 직원”이 맡았다.⁶⁾ “미군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식 종합대학안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등

3) 이 방법의 적용 결과는 다음 연구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다. 金基爽 柳芳蘭, “韓國近代教育의 起源, 1880-1890”,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회, 『教育理論』 제7/8권, 제1호, 1994; 柳芳蘭, 韓國近代教育의 登場과 發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吳成哲, 1930年代 韓國 初等教育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拙稿, 1996; 金基爽 李向珪, “北韓社會主義 教育의 起源, 1945-1950”, 한림과학원, 『翰林論叢』, (근간); 拙稿, 근간 등이 그것이다.

4) 간행된 군정청 자료는 李吉相(編), 『解放前後史資料集II: 美軍政教育政策』, 서울: 原主文化社, 1993. 이하 이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RG332로 함. 노획문서는 方善柱, “鹵獲 北韓筆寫文書 解題(1)”, 『아시아문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참조. 노획문서 중 金大敎員履歷書, 文學部, 1946년, 金大敎員履歷書, 藥學專門, 敎職員任命에 關한 件, 金日成大學發令件, 1947년, Captured Korean Documents, RG242, National Archives 등을 사용하였다. 노획문서의 분류와 분석은 오천석 박사와 장리욱 박사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전쟁 중 동경 미 극동군사령부 심리전 요원으로 차출되어 노획문서의 번역 및 분석 임무를 수행하였다. 吳天錫, 『외로운 城主』, 서울: 광명출판사, 1975, p. 122.

5) 천원은 교육사를 집필할 때 자신이 국대안 발의자였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각주에서 “학무국 안의 韓人職員에 의하여 構想된 것으로서 美側은 受動的 地位에 있었다”고만 밝혔다.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p. 416. 그러나 회고록에서는 자신이 발의자이자 추진자임을 분명히 밝혔다. 회고는 吳天錫, 전제서, 1975.

6) 李吉相, 전제서, 1996. 이하 인용은 앞의 논문임.

교육계를 재편”하고자 국대안을 제안하였다. 미군정 관료에 협조한 조선인 관료들은 “대학별 자치위원회 중심의 교육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진보적 교육세력에 대항”할 목적으로 국대안을 추진하였다. 요컨대, “한마디로 말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실패를 군정 10개월 동안 경험했던 군정청, 그리고 교육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군정 업무에 협조해 오던 당시 체제 내적인 교육계 인사들 사이의 집단 이기주의적 타협의 결과”가 국대안이었다. 대학자치위원회나 학술단체 간부를 맡고 있던 진보적 지식인들은 학무국 미군 장교와 한인 관리의 그와 같은 의도를 간파하였기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전국 규모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1년 여 저항을 하였으나 “수 백명의 학생과 380여 명의 교수”가 희생되었다. 결국 “진보적 교육자들은 교육계의 주류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국대안 반대운동은 실패하여 서울대가 창설되었다. 이상의 주장은 문화제국주의 논의의 핵심 논지와 일치한다.⁷⁾

종래에는 국대안 반대운동이 북의 공산당 지시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보았다. 조선교육자협회가 국대안 반대운동에 깊게 개입하였으며, 심지어 소련 공산당이 남로당에 비밀지령을 내려 전국 규모 맹휴를 지시했다고 한다. 소련군 그즈노프 소좌가 1947년 1월 남로당 許憲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지령문을 결정적 증거로 들고 있다.⁸⁾ 수정주의 사가는 한미 양국 인사들간의 “집단 이기주의적 타협”으로 국대안이 제안되었기에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에 반대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래 주장이든 수정주의 주장이든, 국대안 입안과 실행과 관련되어 파생한 일련의 사건을 대체로 좌 또는 우 어느 한 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冷戰意識의 발로라는 점에서 두 견해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간의 주장은, 수정주의든 아니든, 명쾌하였다. 그만큼 지나치게 단순하기도 하다. 일차원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복잡한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었다. 복잡한 현상을 계급모순에만 착목하여 좌우익 분류 한 차원만 강조한 것이다. 제국대학식 大學自治⁹⁾ 실현이 국대안 파동의 핵심 쟁점임을 간

7) 교육이 문화제국주의의 한 형식으로 강제될 수 있다는 이론은 Martin Carnoy, *Education as Cultural Imperialism*, N.Y.: David McKay Co. Inc., 1974 참조.

8) 이 비밀 지령문은 『教育福祉新報』, 1988년 2월 1일 또는 宋德壽, 『광복교육50년』, 서울: 教育福祉新報社, 1996, pp. 284-285.

9) “大學自治”란 일본 제국대학에서 교수가 대학운영의 핵심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뜻한다. 제대 총장 및 학부장과 같은 간부는 사실상 교수 직선제로 선출되었고 교수의 임용, 승진, 사직, 승급 및 감봉은 교수회의를 통해 행사되었다. 교수자치라 할 수 있는 이 관행은 1913년 발생한 “京大 澤柳事件”을 계기로 공인되었다. 澤柳 京都帝大 학장은 개혁 차원에서 7명 교수를 사직시켰었다. 이에 교수회의는 인사발령에는 교수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퇴결의와 휴강 등으로 항의하였다. 사건 확대를 두려워한 문부상은 사태 수습을 위해 교수회의에 “教授의 任免에 있어서 總長이 운영상 교수회와 協定하는 것은 支障없고 妥當한 일이다”는 각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제대에서의 교수 임면권은 명실공히 교수회의에 부여되었다. 이러한 특권적 지위 부여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Dairoku Kikuchi, *Japanese Education*, London: John Murray, 1909, pp. 365-370 또는 國民教育研究所, 『近現代 日本教育小史』, 東京: 草土文化, 1989, pp. 146-147 참조.

과하였다. 기득권 유지하려는 제국대 출신 교수 대 개혁세력 간의 대학 창설 주도권 쟁탈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국대안 반대운동의 상징인 “교육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大學自治는 개혁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구호에 내재되어 있는 모종의 가치지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자치는 일제 식민지교육의 유산으로 청산 대상인가? 아니면 소위 대학의 본질이므로 존속될 전통인가? 지금까지 이러한 궁금증들은 충실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간 미진했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重層決定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계급 모순과 함께 작동한 민족모순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덧붙여, 대학 기득권 유지세력 대 개혁세력간의 갈등도 고려해 본다. 개혁집단이 힘을 집중하는 매체로서, 정치적 신념 외, 학연 또는 人脈과 같은 관행의 작동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이하 층층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그간 미진했던 질문을 검토해 본다.

Ⅲ. 대학자치와 국대안 파동

이하 비교 검토할 질문은 종래 견해와 수정주의 사가의 견해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이를테면, “국대안은 왜 제안되었으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반대운동은 왜 일어났으며, 이 운동은 과연 실패였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 질문을 다루며 김대를 탄생시킨 종합대학안(이하 종대안)을 비교 준거로 삼았다. 이를테면, “종대안은 교육민주화운동의 이상과 일치하는가?”, “국대안을 반대하고 종대안에 참여하였거나, 또는 이후 서울대에서 김대로 옮긴 교수들은, 김대에서 자신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었는가?” 拙稿에서 밝힌대로, 서울대와 김대는 거의 같은 시기에 준비를 시작하여 1946년 10월 두 주일 차이를 두고 경쟁적으로 개교되었다. 창립 준비로부터 개교에 이어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의 주요 사건 진행을 시기별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두 대학 모두 국립대학으로 창설되었고,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을 통폐합하여 종합대학을 만들었다. 차이가 있다면, 김대는 개교 후 바로 정상 운영되었으나 서울대는 교수와 학생 심지어 타 대학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심한 저항에 부딪혀 일년 후에 비로소 정상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교수 구성을 보아도, 두 대학 교수는 대부분 일제 패망직후 자생한 지식인 결사체 소속 학자였다. 이를테면, 각 대학과 전문학교를 자치적으로 접수한 자치위원회, “學術界의 大同團結”을 위해 조직된

<표 1>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학교 연혁 비교

년 월/일	주요사건	
	南(국립서울대학교)	北(김일성종합대학)
45 10/16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으로 개칭	
45 10 중순	학장 및 학부장, 관립 전문학교장 임명	
46 3/23		“20개조 政綱”에서 대학설립 계획 발표
46 5/29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 조직
46 7/8		김일성종합대학 설치 결정
46 7/13	국대안 발표	
46 8/22	서울대학교 설치 법령 공포(법령 제102호)	
46 9 중순	교수 학생 반대 및 시위	
46 9/15		김일성종합대학 개학
46 10/1		김일성종합대학 개교
46 10/15	서울대학교 개교, 등록거부	
47 2 이후	전규 규모盟休 발생	
47 5/6	서울대학교 설치 수정법안 공포 (過渡立法議院 公法 제1호)	
47 6/13	서울대 신입 이사회, 제적학생 복적 결정	
46 7/13	제1회 졸업	
50 6		제1회 졸업

朝鮮學術院¹⁰⁾, 국학 분야 학회로 재건된 震壇學會¹¹⁾ 등이 그것이다. 이 단체 간부 상당 수는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했던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외부 정치적 조건의 악화로, 자치 단체와 대학내 분열이 나타났으며 이를 자체로 통합할 수 없게 되

10) 학술원 기록에 따르면, 8월 16일 “京城 鐘路基督敎青年會 2層 中和企業會館에서 都逢涉 安東赫 金良瑕 李鉤 許達諸氏가 모여 許達氏의 開會演言에 安東赫氏의 趣旨說明으로 朝鮮學術院設立準備會議”가 조직되었다. 학술원은 조직 실무를 맡는 서기국 외에 10개 분야별 부서를 두고 각 분야 대표적 학자가 부서책임자가 되었다. 즉, 이학부(부장: 도상록, 이하 부장 이름), 약학부(도봉섭), 공학부(崔景烈), 기술총본부(尹日重), 농림부(조백현), 경제법학(백남운), 수산부(정문기), 역사철학(이병도), 의학(윤일선) 및 문헌언어학(이양하) 등 10개 부서가 조직되었다. 朝鮮學術院, “彙報”, 『學術』, 1946년 참조.

11) 8월 16일 인사동 泰和亭에서 宋錫夏와 李丙燾 등은 재건회의를 소집하고 임원을 개선했고 향후 활동방침을 확정하였다. 李相伯, 趙潤濟, 李崇寧, 申奭鎬, 金庠基, 孫晉泰, 柳洪烈, 金壽卿, 都有浩, 李如星, 趙明基, 金永鍵 등이 상임위원으로 확정되었다. 金載元, “光復에서 오늘까지”, 『震壇學報』, 제57권, 1979, pp. 225-239.

자 교수들은 각기 신념에 따라 남북으로 갈라섰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지식인 간의 내부 분열이 어떻게 분단대학의 등장으로까지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대안은 우리 학술계의 내적 필요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그러한 필요를 가장 잘 대표한 인물이 천원이다. 조선의 “전학술계를 대표할 거대한 綜合大學”을 창설하기 위해 국대안을 제안하였다는 그의 증언은 1946년 이래 관련된 모든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국대안 파동 30여년 후,¹²⁾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국대안 구상자를 밝힌지 20여년 후,¹³⁾ 천원은 국대안의 입안과 수행에서 자신이 한 역할을 분명히 밝혔다. 그의 회고를 종합하면, 그는 “몇 주일을 두고 구상한” 국대안을 먼저 유역겸 국장과 의논하여 찬의를 얻었고 다음 라카드 국장 경유 러치군정장관에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얻어 추진하였다. 이 회고는 관련된 다른 학무국 자료와 일치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창립을 소상히 기록한 다른 자료와 일치한다.¹⁴⁾ 이 기록에 따르면, 경성대 크로후트 학장 후임으로 학무국 대학업무를 담당할 미국인 장교가 새로 임명되었다. 고등교육과장직을 승계한 이미군 장교의 “안내”로 국대안이 성안되었다.¹⁵⁾ 아직 이름을 특정할 수 없으나, 그의 역할은 안내일 수 밖에 없다. 그는 경성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크로후트와는 달리 학장과 같은 행정직까지 계승하지는 않았다.

12) 吳天錫, “國大案事件”, 전게서, 1975, pp. 99-105.

13) 吳天錫, 전게서, 1964, p. 416 각주 1.

14)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기록자 및 일자 불명, RG332. 이 자료와 라카드의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From 11 Sept 1945 to 28 February 1946, RG332 (이하 『學務局 一年史』)를 비교하면 국대안 구상 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새로 세울 대학의 조직과 편제에 대한 서술이 동일하다. 다만, 라카드가 편찬한 학무국사의 경우, 국대안 발의 과정 서술은 관련자 이름, 시기, 및 직무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하다. 위 기록은 『學務局 一年史』에 비해 시기나 직무 등에 대해 좀더 명확하다. 전자는 관련자의 증언을 담은 일차 자료이나 후자는 일차 자료를 사용하여 편찬한 역사서술이다. 여기서는 일차 자료에 신빙성을 더 두었다.

15) op. cit., 국대안 구상시 미군 장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즉, Under his guidance plans were drawn for a professorial staff of 465 members to care for a future prospective enrollment of 8,000 students. 곧 이어 이 대학은 경성대 3개 학부와 다른 7개 전문학교를 통합한 대학임을 밝혔다 즉, 여기서 대학이란 서울대이다. 이 표현은 그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제안된 계획의 입안 과정을 도왔음을 뜻한다. 『學務局 一年史』에 따르면, 1946년 12월 12일부터 대학관련 업무를 새로 맡게된 어떤 미군 장교의 임무 중의 하나가 “미국 대학 계획에 의거하여 대학 설립 계획을 구안”하는 것이다. 그가 주역을 담당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또 그가 경성대 학장으로 근무했던 장교라고 기술함으로써 그가 마치 크로후트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였다. 얼핏보면, 크로후트가 경성대 학장직을 그만두고 학무국에 되돌아가 고등교육과장을 맡아 국대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해를 할 만하다. 『學務局 一年史』, p. 28 참조. 그러나 크로후트는 12월 7일까지 학무국에 근무하였으며 국대안 발의 시기에는 학무국에 없었다. 제24군 軍史 담당 장교가 1946년 1월 21일 크로후트로부터 미군의 경성대 이공학부 무단 주둔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였을 때 그의 소속은 의사처였다. 원래 정보 장교로 참전한 점을 고려하면 그는 의사 관련 보직을 맡아 마땅한 인물이다. 크로후트 전출일자는 위 기록 외에 부록, 『學務局 一年史』 참조. 크로후트 면접 기록은 Interview with Lt. CMDR., A. Crofts, U.S.N.R., FOREIGN AFFAIRS SECTION, MG, 21 January, 1946.

미군 장교들은 후임으로 조선인 학장을 임명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그들은 1946년 1월 말 조선교육위원회의 추천과, 본인의 승인을 얻어, 조선인 1명을 학장에 추천하였다. 그러나 군정장관은 그를 적격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장에 임명하지 않았다. 결국, 그와 미국 장교 1명이 복수로 미국 전쟁성에 추천되었다. 느닷없이 앤스테드가 2월 새 학장에 임명되었다.¹⁶⁾ 그는 대학행정 경험이 없는 종군 목사였다. 미군이 남한에 지배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기에 영똥한 인물이 영똥한 곳에서 영똥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요컨대, 미군 장교 가운데 “全學界를 대표할 만한 거대한 綜合大學”을 구상할 인물은 없다. 인력 자원의 취약점 외에도, 학무국은 북의 임인위 교육국과는 비교할 나위없이 느슨한 관료기구였다. 그런 기구의 소속 미군장교로 대규모의 고등교육개혁방안을 입안 추진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크로후트를 제외하면, 대학개혁에 대한 사명감이나 애착을 가진 장교는 하나도 없었다.¹⁷⁾ 같은 학무국 직원이나 미군과 조선인 사이에 업무 추진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目前의 당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斷片的 彌縫的 作業”에 급급하였으나 후자는 “한국교육 전체를 指導”할 것을 고민하였다.¹⁸⁾ 뿐만 아니라, 중앙 학무국과 지방 학무과 간의 업무조정 기능도 매우 취약하였다.¹⁹⁾ 중요 부서 책임 장교도 자주 바뀌었다. 국대안 입안시는 라카드가 국장이었으나 그것을 추진할 때는 피텐저로 바뀌었다. 이런 실정에서 미군 관리가 현존하는 경성대학교와 주요 관립전문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다. “거대한 종합대학”의 창설은 일제 패망 직후 전 학계의 소망이었다. 북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시기에 같은 소망을 실현하고자 제안된 것이 종대안이다. 남에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 국대안이다. 천원은 이 소망을 대변한 것이다.

국대안은 한국 고등교육 “전체를 指導하고 正坐시킬 包括的 靑寫眞”의 하나였다. 그러나 발의자 천원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투사하였

16) 앤스테드의 대학 임명일자는 부록, 『學務局 一年史』.

17) 47년 여름 학무국에 파견되어 업무를 관할한 대학 담당관 Philip Shay는 다음과 같이 학무국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소위 “한국화” 정책으로 책임자가 된 한국인 관리는 미국 고문의 조언을 잘 듣지 않고 있다. 고문의 인력 또한 “형편없이 구성”되어 있고 “총괄 구상”조차 없다. 충분한 훈련과 적절한 경험이 없어 고문의 업무집행이 매우 불충실하다. 실상가상으로 군정청으로부터 재정지원 또한 매우 부족하다. “Report of Activities in Korea”, 20 June 1947, 이길상(편), 전게서, 1991, pp. 314-323.

18) 吳天錫, 전게서, 1975, p. 94.

19) 학무국과 서울시 내무국 학무과 사이의 업무 분담도 불명확하였다. 이는 서울시 학무과 마틴 고문의 파면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 국대안 파동이 수습되는 국면에 들어선 47년 5월 노동절에 참석한 학생들의 처벌과 관련되어 마틴과 학무국 언더우드 고문 사이에 정책 혼선이 일어났다. 마틴은 서울시 중등학교장은 학무국이 아닌 학무과의 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한 반면, 언더우드는 마틴은 “고문”이지 “과장”이 아님을 주지시키는 등의 논쟁을 벌이었다. 이 사건의 전개는 “Clarification of Policy, as result of incident which occurred the 1st week of May, 1947”, 12 May, 1947; “Memo on Clarification of Policy-to School Principals”, 15 May, 1947, 李吉相, 전게서, 1991, pp. 286-294 참조.

다. 그는 식민지고등교육을, 그 폐해를 포함하여,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혁할 의지와 전망을 지니고 있었다.²⁰⁾ 국대안 구상할 때 그가 크게 염두에 둔 것은 식민지 고등교육 유산의 청산이었다.²¹⁾ 그는 국대안의 최대 장점에 대해 1947년에는 “일제 전통인 대학분과주의의 제거”를 들었다. 그는 국립대학에서는 대학자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교수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치제는 동경제대나 교도제대부터 연유한 것임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천원에게 있어 제국대는 특권적 지배층을 양성하는 일제 식민지노예교육의 폐습이다. 자치라는 이름으로 특정 교수집단이 “群雄割據의 排他的 風潮”로 각기 출신 대학을 지배하는 관행을 허용할 수 없었다. 이는 그가 미국에서 직접 겪은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의 신념은 20년후 다음과 같이 반복되었다. 즉, 국대안은

日本の 傳統을 一掃하고, 당시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각 학교의 몬로우 主義的 경향을 깨뜨리기 위한 조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²²⁾

따라서 미국 공립대학에서와 같이 인사 및 재정권을 이사회에 귀속시킬 것을 구상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국대안 설립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위의 이유를 밝힌지 20여 년 후에, 천원은 그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증언하였다. 즉, “당시로서는 입박에 낼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무능력하거나 좌경쪽의 교수를 축출해 내고자 했던 의도도 다분했다”는 것이다.²³⁾ 수정주의자의 주장대로, 국대안은 좌익 교수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쟁점은 식민지고등교육의 청산이다. 그런데 제대식 대학자치는 처음부터 모순적이며 또 이중적이다. 교수자치를 뜻하는 대학자치에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와 함께, 배타적 특권향유 측면이 있다. 천원은 후자를 “대학분과주의” 또는 “몬로우 主義”로 인식하고 청산하고자 한 것이다.

20) 천원은 일본교육에 대한 조선인의 이중 자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한국인은 “日本을 敵對視하면서도 無意識的으로 일본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문 분야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일본 것이 미국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보성전문에 취직할 때 박사 학위를 소지한 매우 드문 학자임에도 제대 출신 학사 만큼의 대우도 못받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일본 인과, 부지부식간에 그들을 닮은, 조선인으로부터 받은 차별과 억압을 통해 천원은 일본 식민지 교육 폐해를 직접 겪기도 하였다. 吳天錫, 전계서, 1975, pp. 74-77.

21) 吳天錫, 전계서, 1964, 吳天錫, 전계서, 1975. Conversation with Dr. Ah, Deputy Dir. of Education, Mar. 1947, RG332.

22) 吳天錫, 전계서, 1964, p. 421.

23) 『敎員福祉新報』, 1987년 9월 28일. 관련 교수들의 국대안 반대에 대해 천원은 그 이유를 일부 무능 교수의 기득권 유지와 좌익 교수의 퇴직 불안에서 찾고 있다. 이 견해는 관련 자료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吳天錫, 전계서, 1975, p. 103.

국대안으로 식민지교육을 청산하려한 인물은 천원 한 사람만이 아니다. 국대안 파동을 조사 보고한 입법의원 보고서에도 천원과 같은 견해가 보인다. 동성고등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면 입법의원이 그렇다. 그가 보기에 소위 “불합작 교수” 생긴 것은 교수자치가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회의가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日本帝國主義의 한 殘滓”이다.²⁴⁾ 47년 봄, 이른바 제2차 국대안 파동인, 전국 규모의 맹휴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던 어느 학부형도 같은 견해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綜合大學案은 우리教育建設에 絶對로 必要하다고 본다. 그 理由를 具體的으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所謂京城帝國大學이라는 것의 뿌리를 빼어야한다는 것이다.²⁵⁾

그는 맹휴의 원인은 학술원 결성과 대자위의 대학 접수로부터 연원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제국대학 졸업생인 “帝大闊”이 독점적 인사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맹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성대 전통을 “徹底히 破壞하는” 것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자 동시에 민주주의 건설에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천원이나 장면 의원처럼 이 학부형도 대학자치의 진보적 요소보다 그것의 특권유지 병폐를 강조한 것이다.

미군 관리들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마치 자신들이 객관적 중재자인양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들이 마치 중립적 입장에 선듯한 자세는 국대안 파동에 대한 미군 정보분석 보고서에²⁶⁾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미 정보당국은 먼저 남로당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였다. 국대안이나 종대안은 모두 같은 취지,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런데 종대안을 지지하는 당원 교수의 월북을 허락한 남로당이 왜 국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국대안의 장점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있음에 틀림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보 관리들은 국대안과 같은 규모의 대학개혁은 조선인 정부 수립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었고 보았다. 차선책으로, 그 전에 시행하려면, 해당 대학의 교수 등 관련자들의 참여와 논의를 거쳐야 했다. 학무국 조선인 관리 중 상당수는 한민당 관련자이다. 반면, 대다수의 교수나 학생은, 공산주의자는 아니나,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장교는 학무국이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좀 더 분명히 인식해

24) 『速記錄』.

25) 趙憲泳, 전계서, pp. 57-61 여기서 “綜合大學”이란 서울대를 지칭한다.

26) “School Strikes in Seoul Korea: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April 3, 1947, RG332, 李吉相(編), 전계서, 1993, pp. 262-282.

야 했었다고 지적하였다. 정치적 신념과 입장에 차이가 있음에도, 理事會에 교수 인사권이 귀속되면 교수들이 불안해 할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적의 손에 놓아 두고 싶지 않으며, 교수 또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²⁷⁾

이 보고서는 교수들이 가진 공통적 불만으로 다음 5가지를 열거하였다. 1) 식민지 대학에서 교수가 향유한 “대학자치”와 교수의 “개별적 권위”의 상실, 2) 소위 “엘리트” 대학교수와 “격이 낮은” 전문학교 교수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불만, 3) 전문학교와 같은 소규모 학교에서 교수들의 특권적 위치 상실, 4) 저임금, 사택 부족, 교통불편, 식량 배급 부족, 동급 공무원과의 불평등과 같은 처우문제, 5) 교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덧붙여, 소위 좌익 교수들의 불만으로는 6) 좌익 교수 해고에 따른 불확실한 장래, 7) 학문의 자유 침해, 8) 사전 의견 청취 결여, 9) 학무국과 대학내 “친일파”나 “모리배”의 존재²⁸⁾ 등이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인사”에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이 아니라, 교수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해결방안을 제안할 것을 권하고 있다. 되돌아 보면, 미국은 국대안 제안 이유와 그것의 문제점 및 반대운동의 원인 등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특유의 탁월한 “과학적 정보 수집능력”을²⁹⁾ 잘 보이는 문서이다. 이 점은 국대안 반대운동과 관련된 “빨갱이 연결망” 조사 보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조공이 학생운동을 배후 조정하려는 행동지침서인 “仁川書翰”을 작성한 바는 있으나 이는 시기적으로 46년 3월이므로 국대안과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민전이 국대안을 “제국주의적” 또는 “비민주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른바 좌익 교수만 국대안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2월 16일 좌익 학생 단체에서 압수하였다고 알려진 유명한 문서-즉, 허헌 위원장에게 맹휴를 지시한 문서-는 소련군 장교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극우 단체가 조작한” 것임을 밝혀내기도 하였다.³⁰⁾ 문서위조 사실을 밝힌 점은 미군정이, 편파적이지 않은 채,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로당이 국대안 반대운동의 배후에 있으나 “매우 조심스럽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민전, 문화예술단체총연맹, 조선교육자협회, 전문대학교수연합회 등 진보 성향 학술

27) *ibid.*, p. 264.

28) *ibid.*, p. 272. 친일파란 학무국 조선인 국장 및 부국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국장은 학병동원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또 한민당 간부였음을 지적하였다. 부국장은 대표적 친일 기업인 화신산업과 관련되었던 의혹을 받았다. 상과대학 신입 학장은 “대단히 성공한” 기업가이자 반공주의자였기에 모리배 소리를 들었다.

29) 方善柱, “美軍政期の 情報資料:類型 및 意味”, 방선주 외, 전게서, 1991, p. 11.

30) “School Strikes in Seoul Korea: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李吉相(編), 전게서, p. 276.

단체는 대부분 남로당 지시로 결성된 것은 사실이다.³¹⁾ 그러나 당이 어느 정도 반대운동에 개입하였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군정 직접통치의 정통성을 뒤흔든다는 점에서는 당의 입장과 반대운동 조직의 지향점과 동일하다. 그러나 당이 직접 개입하였는지 아니면 학술단체들이 자체 판단에 의해 운동을 떠나갔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군정 관리들은 국립대학 창설의 필요성에는 찬동하였으나 대학의 형태, 기능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目前 당면 문제해결”을 위해 “彌縫의 作業” 급급한 그들은 한국인 관리와 달리 반대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맹휴 발생 직후 1947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 총학장 연석 회의를 열어 이사와 총장을 조선인으로 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타협안도 여전히 “대학자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거절하였다.³²⁾ 러치 군정장관은 마침내 2월 27일 국대안의 법적 기반인 법령 102호의 수정을 제안하고 이를 입법위원회에 요청하였다. 흥미 있는 것은 타협안 성안 과정을 전적으로 조선인에게 맡기고 미국은 손을 뺀 것이다. 앞서 밝힌대로, 입법위원의 수정 법률안 통과와 신규 이사회 구성으로 파동은 수습되었다. 수정 법률안은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 승리 또는 패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 경성대학과 관립대학은 폐교되었고 새로 국립대학이란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반대운동 목표가 국립대학의 폐지였다면 그 운동은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운동의 핵심 쟁점이 대학자치라면 9개 대학의 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인 이사회의 구성을 실패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타협이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권한이지만 각 대학별 교수회의는 존치되었다. 사범대학의 경우, 경성사범에서 유래된, 교수가 직선으로 뽑는 대학평의회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대안 반대운동이 반드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면 실패한 것은 오히려 국대안이다. 창립 후 오랫동안 9개 대학은 인사 및 재정에서 상당 정도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경성대학의 각 학부와 관립대학은 “종합대학”을 이룬 것이 아니다. 서울대 개교 22년 후인 1968년에 들어서서 비로서 “종합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른바, 종합화가 실시된 이후에도 대학별 우열다툼과 주도권 경쟁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소위 “총장 직선제” 전후로 그것이 다시 표면화되기도 하였다.³³⁾

31) 金日成大學發令件, 1947, RG242 또는 拙稿, 1996.

32) 이 사실은 『自由新聞』, 2월 18일자 및 『正義新聞』, 2월 19일자 보도기사에 근거하였음.

33) 총장 직선제는 사실상의 제도이지 법적 제도는 아니다. 이 제도의 실현은 서울대학교 공석 견해도도 대단한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 강화된 정부의 대학 통제 장치인 총장 임명제를 절단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장 직선” 방안만이 대학자율화 또는 민주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제국대학의 제도였으며 그것에 대한 향수나 감상이 직선제 선택에 작용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국대학의 모습에서 대학의 본질을 찾는 상당수의 교수들에게 있어서 “교수가 직접 총장을 뽑는다”는 관행은 당연한 것이다. 실지로 이 구호는 서울대 대학자율화운동에서 자주 거론된 구호였다.

요컨대, 반대운동의 영향으로 제대식 대학자치 관행의 일부가 남게되었다. 이 승리의 대가는 크다. 즉, 서울대학은, 김대와 달리, 통일된 종합대학으로서의 발전이 오랫동안 지체되었다. 어떤 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V. 대학의 분단

국대안 반대 운동의 중심 세력을 이룬 유능한 제대 출신 서울대 교수들은 북으로 가 김대에서 창설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각자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였고 또 학생들로부터 “수재”로 알려진 교수들이다.³⁴⁾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김대로 옮겨 갔는지를 밝히는 것은 국대안 반대운동이 표방한 교육민주화운동의 다른 측면을 밝히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분단대학 기원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대안 반대가 과연 말 그대로 “교육민주화”이었는지를 살펴 본다. 이 용어는 좌우익간의 이념투쟁 중에 사용된 수사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견지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 점은 “불합작” 교수들도 잘 알고 있었다. 1946년 경 상식 처럼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이고 일본은 가장 악랄한 군국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미국식” 대학을 비민주적이라고 질타하고 “일본식” 대학의 유지를 교육민주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경성대 법문학부 박극채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한 논리적 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팃쇼化의 一路를 밟는 日本에서까지라도 大學에 있어서의 研究의 自由, 學問의 自由, 學生의 自由, 敎수任命辭任의 敎수會議에 의한 決定權 등은 最近까지 確立되어 있었으며...³⁵⁾

한인석 교수 또한 “敎授推薦, 部長 總長을 모다 敎授會議의 決定”에 맡기는 “敎수자치권”은 일본 대학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그것이 존속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日本과 같은 非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도 大學을 官僚의 손로부터 確保하기 위하여 防禦線이되는 敎授自治權은 認定되고 있었다.³⁶⁾

팃쇼국가,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장된 자치권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 안

34) 金大敎員履歷書, 文學部, 1946, RG242.

35) 朴克采, “民主主義學園의 確立”, 『朝鮮人民報』, 1946년 7월 17일.

36) 韓仁錫, “國大案과 朝鮮敎育”, 『우리公論』, 1947년 4월, pp. 18-34.

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수자치권은 “일본에서까지”가 아니라 일본 제국대학 특유의 것이었다. 물론 교수회의의 모범은 독일 대학으로부터 일본에 이식된 것이다. 그러나 “불합작” 교수들이 생각하는 교수자치는 일본 “국가주의교육”의 산물이다. 대학자치는 일본 사립대학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교수자치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미국대학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교수자치권을 전제하지 않고도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수자치는, 제국대학에서와 같이, 교수에게 부여된 특권과 권위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팻쇼국가 일제의 지배층 양성을 위해 부여된 제한적 배타적 특권이다. 따라서 그것은 “日本帝國主義의 한 殘滓”이기도 하다. 문제는 “대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나 사상이다. 제국대학 출신, 미국대학 출신 또는 소련대학 출신은 각기 다른 대학에 대한 관념을 상정하고 있다. 또 식민지교육의 청산 대상 특정과 대안 제시에 대한 관념 또한 각기 달랐다. 대학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대안 반대의 선봉에선 제국대학 출신 교수들은 김대로 옹기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지는 않았다. 대학자치권 분쟁은 결국 교수 임명권 확보 투쟁이었다. “불합작” 교수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학무국 관리들은 그것을 혁파하고자 하였다.

‘불합작’ 교수들은 국대안 반대운동을 “교육민주화”운동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이념 투쟁에서 중요한 우위를 확보하였다. 그들이 생각한 민주화는 교수자치였다. 한인석 교수의 말대로, 교수들이 학장과 총장을 뽑음으로써 “비로서 學長과 總長은 全教授의 意思를 代表”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화의 요체이다.³⁷⁾ 불합작 교수들은 교수자치의 두 측면 중 진보적 면을 강조함으로써 반대 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 지지를 확보하였다. 반대운동은 관련 교수들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의사 표시 이상의 조직적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교육민주화”운동에서의 “교육”은 수사적 표현일 뿐 실지로는 정치투쟁이었다. 미군 정보 당국이 지적한 대로, 남로당은 일관성 없이 북의 종대안은 환영하고 남의 국대안은 반대하였다. 국대안을 추진하는 미군정 정통성 위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교육민주화”로 표현하였기에, 교수나 강사는 물론 학생과 교직원도 대부분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나중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각급 학교 학생들 또한 “교육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맹휴에 참가하였다. 입법의원 조사에 따르면, 이 운동은 “前無하고 後無한 政治的 運動의 한 一端”으로 “各學校에 細胞組織을 두고 綿密周到한 計劃과 敏捷한 活動으로 盟休를 煽動”함으로써 “一定한 指令下에 機械的으로 運動”에 들어간 운동이다.³⁸⁾ 불합작 교수들은 대중동원에 성공하였다. 일반 대중은 국대

37) 상계서.

38) 『速記錄』.

안 자체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았다. 마치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대안은 미국인의 음모로 보였다. 민족감정은 국대안 반대운동을 더욱 증폭시켰다. 수정주의자가 착목한 계급모순만큼, 실은 그 이상, 민족모순이 국대안 파동의 動因으로 작용하였다.

국민의 공감을 산 국대안 반대의 명분은 대학자치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김대에 대한 拙稿에서 밝힌 대로, 김대에서는 제국대학식 대학자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국대안을 반대한 교수들의 대학자치는 곧 교수자치였고 그 핵은 총장과 학장 및 교수의 선출을 교수들 자신이 담당하는 인사권의 확보이다. 그러나 김대의 학부장이나 카페뜨리아(講座)장 등 행정책임자들은 모두 당과 임인위 교육국에서 임명하였다. 그들은 “全教授의 意思를 代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과 교육국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선출되었다. 김대의 대학 기구에는 교수회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사 및 재정에 있어 학내 주요 의사결정 경로를 보아도 교수의 의사결정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제국대학에서와 같은 명칭의 大學評議會가 설치되었으나 그것은 최고의결 기구가 아니다. 대학 창설 전후 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이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그것은 남에서 학무국이 국대안 입안 및 집행에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한 것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

서울대와 김대를 교차분석하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오히려 대학자치의 요소를 더 많이 허용하고 있다. 교수회의가 잔존하였고 제한된 것이나 일정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대학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대안에 심하게 저항하고 북으로 간 전 서울대 교수들은, 교수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종대안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학생들을 부추겨 대학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한 반대운동을 벌이지도 않았다. 이것은 분명 일관성 결여다. 북으로 간 교수들의 일관되지 않은 선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들의 일관성 결여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대학자치의 실현은, 국대안 반대의 명분으로만 작용하였고, 실질적 이유가 아니었다. 국대안 반대 실질 이유는 교수직 보존이며 특히 배타적 특권의 유지였다. 식민지 고등교육의 표준으로 보면 제대만이 “대학 중의 대학”이며 여타 전문학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경성대의 명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 시기 옛 제대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이자 권위의 상징이다. 특히 국내외 제대 출신에게 있어 그것은 평생을 통해 추구하였던 바 일 것이다. 따라서 국대안에 의해 그러한 특권을 다른 전문대학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교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실은 다른 학교와 차이가 있는 명문대학의 교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대안 반대투쟁에 나선 것이다. 다만, 그들의 투쟁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대학자치나 교육민주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사상투쟁을 벌인 것이다. 전국맹휴

를 야기시키는 등 그들은 이 사상투쟁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결과 서울대는 일년여 마비상태였다.

식민지 고등교육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개혁세력은 대학자치라는 명분 안에 내재된 제대 출신 교수들의 기득권 유지를 간파한 것이다. 그들은 제대 출신들의 “群雄割據의 排他的 風潮”로 소속 대학을 독점하게 나눌 수 없었다. 이러한 다툼에서 개혁세력은 국대안 반대 운동의 중심 세력인 제대 출신 유능한 남로당원 교수들을 모두 좌익으로만 파악하였다. 개혁세력에게 있어 식민지 청산과 좌익교수 축출을 같은 일로 보았다. 그러나 국대안 반대운동 후, 서울대에 남아 있는 교수는 물론, 북으로 간 교수가 모두 좌익 사상에 의거하여 국대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학벌, 능력 및 정치적 신념 등 세 범주는, 얼핏 중첩되는 듯 보이나, 동일 범주가 아니다. 또 어느 한 범주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적 범주이다. 다만, 기득권 유지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에서 개혁세력은 국대안 반대세력을 하나의 범주인 좌익으로 묶은 것이다. 사상투쟁에서 우위를 점한 반대운동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다양한 반대운동 세력을 모조리 좌익 한 가지 범주로 파악하였다. 미소간의 견제와 대립이 첨예화함에 따라 점차 그 특징을 드러낸 냉전체제아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 범주를 하나의 범주인 좌익으로 묶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미군의 직접통치체제에서 친일은 용인되나 친공은 용인될 수 없다. 개혁세력의 국대안 반대세력의 단순화는 상당 정도 성공하였다. 따라서 국대안 파동은 오랫동안 좌우의 대결이란 단색으로만 조망되었다. 이는 지나친 단순화이다.

단순화를 피하려면, 국대안 반대를 여러 수준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좌우의 사상 투쟁은 대학 교수직이란 기득권 유지 투쟁의 상징 수준에서의 다툼이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 유지의 근본 이유는 학자로서 자아실현이었다. 이 점 좌우 어느 편도 마찬가지이다. 좌우를 떠나, 학자들은 저마다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을 다바쳐 봉사하고자 하였다. 목숨조차 버리고자 하였다. 이같은 포부를 실현하기위해 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수자리다. 국대안은 자아실현 기회의 박탈로 비쳤다. 그런데 남로당은, 학무국에 비해, 대학 교수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또 그들이 마음 속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상당수의 학자들이 국대안 반대 대열에 서게 된 것이다.

학무국은 “거대한 종합대학” 창설이란 원래 의도를 실현할 실질적 물질적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확보한 것은 미군정의 지배적 권위와 그들이 허용한 일부 권한 밖에 없었다. 매우 제한된 자원과 역량의 표현이 국대안이다. 이 안은 법령으로 공포된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았다. 문서상의 개혁이다. 종합대학으로 마땅

히 갖출 대규모 교사나 교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고학부”에 합당한 대학 시설과 설비 투자 계획도 전혀 없다. 당대 최고의 과학실험시설인 경성대 이공학부는 미군들의 무단 진주로 폐허화되었다.³⁹⁾ 장마철 비 새는 것을 막을 긴급 예산지원 조차 쉽지 않았다.⁴⁰⁾ 국대안은 마음만 앞선 성급한 졸속 계획이었다. 개혁세력은 김대 창설에서처럼, 별도의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 북의 김대에서처럼 “愛國米”와 같은 전국적 지지와 성원의 동원에도 실패하였다. 이러한 여건과 풍토에서 교수들은, 정치적 신념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대학을 선택하고자 한다. 학문다운 학문을 하고 싶어 북으로 간 교수도 많다. 연구여건 조성에 관한한 중대안은 국대안보다 학자들의 마음을 더 잘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창설에서 미국 관리의 역할은 종래 알려진 것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고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종래에는 미군 관리와 한인 관리들이 마치 합심하여 국대안을 추진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共謀說”로 지칭될 만한 이 견해는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군 관리는 거칠고 세련되지 않은 업무 처리로 오히려 반미감정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군부대의 무분별한 시설 파괴외에 반미감정을 조장한 조치가 많다. 대표적 사례로 서울대의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중요 행정직에 미국 시민권자를 임명한 조치가 있다. 이러한 거친 행정조치로 미국인들의 역할이 실지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하였다. 제국대학 교수에게 부여된 존경과 특권에 비추어 보면 총장의 권위와 위엄은 대단할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 앤스테드는 매사 “자, 기도합시다”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습관은 각 대학의 조선인 학장과 간부 교수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억압이자 민족적 멸시로 보였을 것이다. 사태를 엉뚱하게 더 악화시킨 것은 피텐저 학무국장의 무분별한 처신이다. 46년 12월 문리대, 상대 및 법대 학생들이 맹휴를 결의하자 그는 “군복에다가 유난히 큰 권총을 차고 나와 장대를 순시”하였다.⁴¹⁾ 또 해당 학교에 대해 휴교를 명하고 관련 학생 전원 처벌할 것을

39) 미군의 경성대 이공학부 시설 파괴에 대해서는 Major Lockhard Report, From 11 Sept. 45 to 28 Feb. 46, 또는 Interview with Lt. CMDR., A. Crofts, U.S.N.R., FOREIGN AFFAIRS SECTION, MG, 21 January, 1946, Interview with Major Lockhard, 9 March, 1946. 참조. 크로후트에 따르면 학교 시설은 “칠저하게 유린되어 도저히 복구 불가능”하며 이러한 무분별한 파괴로 조선에서의 진정한 과학교육은 “최소한 10년간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하였다.

40) Harry B. Anstead, Progress Report : Seoul National University, 4 Aug., 1947, RG332. 서울대학에 대한 중앙행정기구의 지원은 매우 빈약하였다. 46년 사사분기 예산은 연말이 지나도록 영달되지 않았다. 47년 예산은 4월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다. 못쓰게 된 학교 지분을 고치기 위한 “긴급 시설복구 예산 신청 조차 기각”되어 장마철에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전기 및 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공대 건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문리대 이학부 실험실 설치까지 연기되었다. 재정 부족과 책임 소재 불투명 등으로 초창기 서울대학은 국가 수준의 재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41) 이하 피텐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張利郁, 전계서, p. 236 또는 『速記錄』 참조.

지시하였다. 그의 무분별한 행동은 서울대학 교수에게 보낸 서한의 일방적 공표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그는 학생 시위에 내내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수에게 “당신의 척추 속에는 강철(steel)같은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할 텐데 알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고 감탕(mud)만이 가득차 있구려”라는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⁴²⁾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그의 경솔한 행동으로 학생과 교수 사이에 반미감정은 고조되었다. 앤스테드처럼, 엉뚱한 인물이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장소에 나타나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이다.

일부 미군장교들의 부적절한 행동성향이나 습관 외에 더 중요한 문제는 물론 그들이 지키고자 한 집단적 이해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익 편에 선 것은 아니었다. “斷片的 彌縫的 作業”에 급급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객관적 정보 분석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최종심급에서 우익으로 회귀한 것이다. 따라서, 개혁세력은 국대안 반대 세력을 좌익이란 한 범주로 묶을 수 있었다. “學術界의 大同團結”에 근거한 국립종합대학설립안이 있었다라면 군정관리는 그것을 실현하는데 협조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미군의 문화제국주의적 침략 탓으로 대학이 분단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인과 학자 집단 내분에서 유래하였다. 미군정의 직접통치라는 정치적 조건과 엉뚱한 미군인의 돌발적 출현이란 사건으로 분단대학체제 창출은 더욱 촉진되었다. 미군은 문화제국주의자처럼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제도를 강제한 것이 아니다. 그럴만한 역량이 없었다. 다만, 자체의 분열로 자국 이익을 보호하려는 미군관리들의 개입과 간섭을 조선 전체의 이익보장으로 전환할 만큼 내적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였다. 점차 뚜렷해지는 냉전체제, 직접통치에 따른 조선과 미국간의 국익 상치, 점령군과 군정간의 업무조정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과 중첩된 지식인 사이의 내분은 끝내 대학의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V. 결 어

일제 패망후 식민지 고등교육의 청산에서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집단간의 경쟁이 있었다. 학무국 미군관리, 우익 정당 소속 조선인 관리, “帝大閥”로 알려진 제대 출신 교수과 그렇지 않은 교수, 소위 친일파와 그 비판 세력 등은 국내외 정세 변화 가운데 정치적 노선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집단은, 마치 서유럽 국가의 지위집단처럼, 격심한 경쟁을 벌이며 분단 고등교육체제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⁴³⁾

42) 張利郁, 전제서.

43)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이루어진 지위집단경쟁이 어떻게 근대적 국가교육체제 형성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는지 Margaret Archer, *Social Origins of Educational Systems*, London: Sage, 1976 또는 김기석, “중등교육 팽창의 역사사회적 조건과 동인”, 『교육사회학탐구』 II, 서울: 교육과학사, 1994 참조.

서울대와 김대 창립에는 관련 이해집단만이 아니라 대학간의 경쟁도 있었다. 이들간의 경쟁 또한 두 대학이 각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하였다. 준비 단계부터 상호 의식과 경쟁 및 견제가 있었다. 비단, 교육관료만이 아니라 교수들도 그렇다. 초청 대상 교수들은 두 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비교 검토한 것은 물론 심지어 남북 정치 정세까지 고려하여 대학을 결정하였다. 이 경쟁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 같았다. 제한된 물적, 인적 자원에서 어느 한편이 중요한 몫을 확보하면 그 만큼 다른 한편은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교수 총원과정에서 대학간의 경쟁은 가장 심하였다. 국대안을 반대한 교수들 상당 수가 서울대학에서 김대로 자리를 옮겼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종대안에 비판적인 인물은 결국 김대를 버리고 서울대학을 찾았다. 제한된 자원아래 같은 시기 남북에서 각기 “최고학부”를 만들려고 하였기에 경쟁이 심하였다. 이 경쟁 또한 고등교육의 분단을 촉진 시키었다.

서울대학은 “民族輿望의 最高學府”에 걸맞는 국민적 지지나 참여도 없었다. 서울대학은 김대와 같은 중앙행정기구의 획기적 재정 지원도 없었다. 그러나 김대는 “과학의 최고전당” 건설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서울대는 신화처럼 잔존해 있던 과거 제국대학의 전통, 관행 및 명성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이다. 서울대학은 자체의 인적 자원에 의존하여 스스로 성장하였다.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에 비해 형편 없이 막후된 시설과 열악한 재정 형편은 개교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불식된 바 없다.

<Abstract>

The Formation of Divided Education System in Korea
after Liberation, 1945~1948:
The Ri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im Il-Song University

Kim, Ki-Seok

From the presenc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and Kim Il-Song University in Pyongyang, we clearly see a case of the divided higher educational system in Korea. This paper addresses a series of questions concerning the educational origins of the divided education system at the university level. Recounting both the traditional and revisionist views on the nature of socio-political movements agains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eafter, SNU) Plan, this paper makes a claim that not the imposition of American imperialist interventions but a division within the variety of scholarly organizations among Korean academics and professors, who failed to keep up their promise of the Grand Unity, was conducive to the division. The two universities were created in October 1946 with just a two week interval. Hardly different were the rationale and procedures for the making of a "Supreme University" in the two. Moreover, seen from the composition of leading faculty members of each university, they were born as an identical twin.

A contradiction built in university autonomy was the moving forces of the keen disputes on the SNU Plan which did not permit any form of self-government of faculty members. A legendary tradition of self-government among professors first become de facto legitimate practices during the struggle for the freedom of academy in the history of the Japanese Imperial Universities.

And it was, however, maintained to protect the vested interests among professors of the privileges and prestiges which were never shared to other professors in the private universities or colleges. Newly appointed professors, who were mostly graduates of Imperial Universities and were members of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and leaders of various scholarly organizations wanted to inherit a progressive element of university autonomy, while reform-minded bureaucrats who were graduates of American universities and members of the rightist political parties wanted to remove a reactive element of faculty autonomy which in fact led to the Japanese vicious tradition of school sectionalism. Contrary to the claims made by revisionists, it was not the movement against the SNU Plan but the Plan itself that failed. The rise of SNU is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competing groups. This group competition facilitated the division. Key members of the former group who opposed to the SNU Plan went Pyongya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king of Kim Il-Song University and became the backbone of it. Some of the legacies of Imperial University still remains in SNU.